

## 동아시아 지역주의: ASEAN의 시각과 전략

권 율\*

### I. 머리말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움직임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 동안 동아시아의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상호의존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측면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왔으나, 최근 ASEAN+3 정상회의가 매년 개최되면서 동아시아 역내 주요 현안은 물론 다각적으로 경협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당초 ASEAN+3 정상회의는 느슨한 협의체로서 출발하였지만, 경제협력은 물론 정치·안보분야 및 사회·문화분야 등 역내 주요 이슈를 협의하는 창구로서 역할하고 있고, 최근에는 동아시아에 있어서 제도적 통합에 대한 논의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역내국가간의 쌍무적인 자유무역협정 논의도 최근 몇 년간 활발히 진행되면서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본은 물론 싱가포르와 2003년 10월 FTA 공동연구를 마치고, 2004년부터는 본격적인 양자간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

\*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서남아팀장. ykwon@kiep.go.kr

한 2003년 10월 개최된 7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한·ASEAN FTA를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협력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제반 논의가 상당부분 ASEAN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고, 역내 공식 협의기구인 ASEAN+3 협력체제의 경우에도 ASEAN의 결속력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ASEAN+3 협력체제는 대외경제정책 공조뿐만 아니라 금융 및 산업정책, 역내 개발협력 등 다양한 차원에서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실질적인 경제통합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로서 기능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더욱이 지역주의 추세는 보다 강화되어 동아시아의 역내 무역·투자관계에서 나타나는 ‘기능적 통합’에 상응한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이 보다 증대된다면, ASEAN+3 협력체제를 매개로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은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재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구상이 역내에서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고, ASEAN 측도 AFTA가 개도국간 南-南협력체라는 구조적 한계점을 인식하여 한국, 일본, 중국은 물론 오세아니아, 서남아 등과의 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ASEAN의 외연적 확대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ASEAN의 성장잠재력과 역내 시장통합의 조기실현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내기술 및 자본 부족에 따라 통합체 내의 경제적 자립이나 내부결속력은 아직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SEAN은 동북아와의 경제통합에 있어서 자유무역지대와 같은 제도적 통합에는 아직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전략적으로 ASEAN 경제통합의 심화와 외연적 확대를 통해 ASEAN+3 협력체제에 주도적 역할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ASEAN과 중국의 FTA 추진 합의로 일본, 인도 등도 ASEAN과의 경제협력 기반확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ASEAN 역내 회원국들의 경우 현격한 경제력 격차 및 산업발전의 차이로 역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다소간의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ASEAN+1 차원에서 협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월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ASEAN 정상회담에서는 ASEAN 공동체(ASEAN Community) 달성을 위한 「ASEAN 협력선언 II」(Declaration of ASEAN Concord II, 이하 발리협약 II)에 합의하여 ASEAN 경제통합의 심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본고는 ASEAN을 매개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현황과 추진성과를 ASEAN+3 협력체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ASEAN이 동북아 3국 및 주변지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어떠한 시각과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진로와 주요과제를 검토해 보고,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II.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구도

### 1. 동아시아의 경제적 위상

그 동안 역동적 성장패턴을 보여 온 동아시아 지역<sup>1)</sup>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압축적인 성장을 달성하면서 경제규모면에서 NAFTA, EU에 이어 주요 경제권으로 부상하였다. 2002년 기준으로 ASEAN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으로 구성된 ASEAN+3 경제권은 세계 전체 GDP의 18.7%, 총 교역액의 19.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표 1 참조).<sup>2)</sup>

1) 일반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은 일본, ANIEs, ASEAN, 몽골, 연해주 등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나, 본고에서는 특별한 명기가 없다면 ASEAN, 한국, 중국, 일본(ASEAN+3)으로 한정하였다.

2) <표 2-1>를 보면, 1998년 ASEAN+3의 GDP 비중이 21%에서 2002년에는 18.7%로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비중이 높은 일본

외환위기 이전에는 역내의 급속한 공업화를 기반으로 東아시아의 순차적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역내분업구조에 의한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발전됨에 따라 역내교역 및 투자가 확대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의 단계적 발전, 시장규모의 제약에 따라 동아시아 경제의 동태적 발전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안행형태의 산업발전패턴(wild geese flying pattern)에 의하면, 일본을 선두로 아시아 NIEs→선발 ASEAN→중국→후발 ASEAN(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으로 동아시아 경제의 중층적인 분업관계가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7년 중반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해 최악의 경기침체를 경험하기도 했으나, 1998년부터 본격화된 강도 높은 경제개혁과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1999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는 그동안 지연되어 왔던 각종 개혁조치와 산업 구조조정의 추진을 통해 동(同) 지역 경제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표 1〉 주요 경제권역별 GDP 규모와 세계에서의 비중(1998~2002)

	1998		1999		2000		2001		2002	
	십억달러	%	십억달러	%	십억달러	%	십억달러	%	십억달러	%
ASEAN	550.0	1.80	581.0	1.85	552.2	1.74	610.4	1.89	653.5	1.83
한중일	5,876.0	19.20	6,304.2	20.05	5,760.2	18.11	5,710.3	17.71	6,020.7	16.82
ASEAN+3	<b>6,426.0</b>	<b>21.00</b>	<b>6,885.2</b>	<b>21.90</b>	<b>6,312.4</b>	<b>19.85</b>	<b>6,320.3</b>	<b>19.60</b>	<b>6,674.2</b>	<b>18.65</b>
NAFTA	8,551.0	27.94	7,894.0	25.11	7,932.1	24.94	8,651.6	26.83	10,591.3	29.60
EU	10,416.7	34.04	11,130.1	35.40	11,421.2	35.91	11,817.9	36.65	12,351.3	34.51
세계	30,603.2	100.0	31,442.0	100.0	31,804.5	100.0	32,247.3	100.0	35,785.9	100.0

자료: GlobalInsight, June 2003, *World Overview: Quarterly*.

경제의 장기적 침체로 인해 ASEAN+3 전체의 경제적 비중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경제가 회복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어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비중은 세계 GDP의 약 20%를 전후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표 2> 주요 경제권역별 총교역규모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1998~2002)

총 교역	1998		2000		2002	
	규모 (십억 달러)	비중(%)	규모 (십억 달러)	비중(%)	규모 (십억 달러)	비중(%)
ASEAN	599.0	5.48	804.3	6.20	780.8	5.96
한·중·일	1320.9	12.10	1785.1	13.75	1788.7	13.66
<b>ASEAN+3</b>	<b>1919.9</b>	<b>17.58</b>	<b>2589.4</b>	<b>19.95</b>	<b>2569.5</b>	<b>19.62</b>
NAFTA	2297.3	21.04	2850.4	21.96	2682.7	20.49
E U	4073.6	37.30	4468.3	34.43	4660.4	35.59
세계전체	10920.7	100.00	12979.5	100.00	13093.5	100.00

자료: IMF, June 2003,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Quarterly*.

한편 ASEAN+3 지역의 역내수출 비중은 1985년 25.6%, 1990년 26.2%를 기록하였으나, 1990년대 초반 이후 ASEAN의 경제통합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중국과 ASEAN의 급격한 경제성장이 진행되면서 1995년 역내수출비중은 34.2%로 크게 확대되었다. 반면에 ASEAN+3 지역의 대미수출비중은 1985년 30.8%에서 1995년 22.2%, 2001년 24.0%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그림 1 참조). 외환위기 이후 역내수출비중이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동 지역의 경제회복과 함께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80년대 중반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이 역동적인 성장을 기록하면서 ASEAN, 중국 등이 신흥시장(emerging market)으로 부상되자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확대되어 왔다. ASEAN은 80년대 중반 이후 연평균 8%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룩,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하면서 NIEs와 함께 동아시아 경제성장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한편 중국, 베트남 등 동아시아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우 개혁·개방체제로 전환되면서 90년대 초반에는 중국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본격화되었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으로의 직접투자는 9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여 2001년에는 약 469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ASEAN의 경우 경제불안정이 심화되면서 FDI 유입액이 급감하였으나, 최근 회복세

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1〉 ASEAN+3 역내 및 대미수출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주: ASEAN통계는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제외.  
 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KOTIS 데이터베이스 이용).

〈표 3〉 동아시아 주요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현황 (단위 : 백만 달러)

	1990~95 (연평균)	1997	1998	1999	2000	2001
싱가포르	5,782	10,746	6,389	11,803	5,407	8,609
태 국	1,222	3,626	5,143	3,561	2,813	3,759
말레이시아	4,655	6,324	2,714	3,895	3,788	554
인도네시아	2,135	4,677	-356	-2,745	-4,550	-3,277
필 리 핀	1,028	1,249	1,752	578	1,241	1,792
브루나이	102	702	573	596	600	244
베 트 남	947	2,587	1,700	1,484	1,289	1,300
라 오 스	33	86	45	52	34	24
미 안 마	180	387	314	253	255	123
캄보디아	80	-15	230	214	179	113
중 국	19,360	44,237	43,751	40,319	40,772	46,846
일 본	1,144	3,224	3,193	12,741	8,322	6,202
한 국	978	2,844	5,412	9,333	9,283	3,198

자료: UNCTAD, 2002, *World Investment Report 2002*.

## 2. 동아시아 경제협력구도의 변화

그 동안 동아시아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능적 통합에 상응하는 제도적 협력기반이 존재하지 않았다. 1990년에 마하티르 총리에 의해서 제안되었던 동아시아 경제협의체(East Asia Economic Caucus: EAEC)<sup>3)</sup>구상이 1993년 7월 ASEAN 외무장관회담에서 공식 합의된 바 있으나, 미국의 견제와 일본의 소극적 태도로 무산되었다.<sup>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ASEAN은 중국과 함께 미국 중심의 아·태 경제 질서에 반대하면서 지속적으로 동아시아 경제권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갖자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왔다. 특히 ASEAN은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강화로 지역정세가 안정화됨에 따라 동아시아 유일의 지역공동체로서 정치·경제적 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경제적으로는 ASEAN 자유무역지대(AFTA)를 결성하여 교역활성화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지역경제통합을 가속화하면서, 역내 결집력을 활용하여 역외국과의 대화체제를 강화해 왔다. 이에 따라 아세안 지역포럼(ARF, 1994년 창설) 및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ASEAN PMC)을 통해 주변국과의 협상력을 확대해 왔다.

3)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수상은 당초 EAEG(East Asian Economic Group)을 주장하였으나, 제안내용이 ASEAN에 의하여 공식 채택되면서 EAEC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Hadi Soesastro(2001: 226) 참조

4) 당시 미국은 1991년 11월 베이커 국무장관을 통해 한·일 통상장관에게 각각 EAEC 불참요청을 한 바 있으며, 1992년 1월 부시 대통령은 싱가포르 및 일본 방문시 EAEC를 무역장벽으로 간주한다는 경고성 발언을 한 바 있다. 클린턴 행정부도 EAEC에 대해 여전히 APEC의 진전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 왔고, 일본도 아시아의 경제협력은 미국, 호주, 캐나다를 포함한 APEC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고수해 왔다.

특히 ASEAN 주도로 ASEM이 추진되고, EU의 결속력에 상응하는 동아시아 국가간의 협력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ASEM은 1994년 10월 고촉동 싱가포르 총리가 제안, 아시아 10개국(ASEAN, 한, 중, 일)과 유럽 15개국이 참가하는 제1차 회의를 1996년 방콕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마하티르 총리가 1997년 ASEAN 30주년을 맞이하여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ASEAN 비공식 정상회담에 한국을 포함, 중국과 일본이 초청됨으로써 ASEAN+3 정상회담이 태동하게 되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매년 ASEAN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한국, 중국, 일본 정상을 공식 초청하여 ASEAN의 결집력을 토대로 ASEAN+3 역내협력 기반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지역에서는 지역주의 참여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으며,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ASEAN 혹은 회원국을 매개로 다양한 형태의 FTA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이 FTA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세계적인 지역주의의 확산과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sup>5)</sup>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역내국가 간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 확대와 함께 통상정책에 있어서 FTA의 전략적 측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WTO에 의한 다자간 교역자유화는 참여국가가 많기 때문에 신속한 결과를 얻기 어렵지만, FTA의 경우 WTO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자유화가 가능하고 협상이 용이하기 때문에 수출확대정책을 추진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도 FTA가 주요 관심사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아시아지역의 유일한 지역협의체로 성장해 온 ASEAN이 역내 금융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확산에 중심

5) 2002년 6월 말 현재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은 143건이고, 그 중에서 1995년 WTO 출범 이후 체결된 FTA는 76건에 이르고 있는데, 아시아·태평양지역은 3건에 불과함(JETRO 2002).



적 역할을 하게 되고,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비로소 역내국가들이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깨닫게 됨으로써 FTA논의가 확산되는 주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ASEAN+3 협력체제가 본격화되면서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의 적극적인 FTA 추진 움직임과 함께 동남아 국가들을 매개로 인도, 미국, 호주 등 주요 역외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sup>6)</sup>

〈표 4〉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동향

관련국가	진행 상황
ASEAN	ASEAN 6개국 1992년 1월 AFTA 체결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가입으로 ASEAN 10 실현
싱가포르-뉴질랜드	2000년 11월 Closer Economic Partnership(CEP) 체결
싱가포르-일본	2002년 1월 FTA 체결
싱가포르-EFTA	2002년 6월 FTA 체결
한국-칠레	2002년 10월 FTA 타결 후, 2004년 2월 국회비준
중국-ASEAN	2002년 11월 정부간 공식적인 합의, 2010년을 목표로 협상중 -농산물에 대한 선자유화조치 2004년 추진 개시
인도-ASEAN	2002년 11월 FTA 추진 합의
태국-인도	2002년 11월 FTA협상 개시, 2003년 하반기 체결 예정
한국-중국-일본	2003년 한중일 FTA 공동연구 개시
싱가포르-호주	2003년 2월 FTA협상 체결
싱가포르-미국	2003년 5월 FTA협상 체결
싱가포르-인도	2003년 5월 FTA협상 개시
중국-ASEAN	2003년 10월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체결
일본-ASEAN	2003년 10월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체결
인도-ASEAN	2003년 10월 포괄적 경제연대협정 체결
일본-ASEAN	2003년 12월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양자간 FTA 협상중
한국-싱가포르	2003년 10월 산관학 공동연구 완료, 2004년 정부간 교섭 추진중
한국-일본	2003년 10월 산관학 공동연구 완료, 2004년 정부간 교섭 추진중

주 : 2004년 2월 현재까지의 추진현황 정리, 역외국가와의 추진현황도 포함.

자료 : 필자작성

6)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확산을 금융위기와 연관하여 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Bergsten(2000); Eichengreen(2002) 등을 참조.

### 3.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ASEAN+3 협력체제

태국에서 촉발된 외환위기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역내 경제안정을 위한 정책공조의 필요성이 급속히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하노이에서 ASEAN+3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역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협력방안이 본격 논의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ASEAN과 동북아 3국은 역내 지역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즉, 역내 국가들의 거시경제정책을 조화시킴으로써 환율 불안정 요인을 제거하고,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단기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 등이 역내 공동현안으로 제기되었다.<sup>7)</sup>

이후 ASEAN은 역내 결집력을 토대로 ASEAN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한국, 중국, 일본을 공식 초청하여 ASEAN+3 역내협력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매년 ASEAN+3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1999년 마닐라 정상회의에서 연례화가 공식 합의됨에 따라 2000년부터 외무회담, 경제장관회담, 재무장관 회담이 상설화되어 역내 주요 현안과 협력방안이 체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도 2-2 참조). 이밖에도 2001년부터 농림장관회의와 노동장관회의가 개최되고 있고, 2002년에는 관광 및 환경장관회담, 2003년에는 보건 장관회담이 개최되는 등 총 8개 장관급 회담이 개최되고 있다. 실무적 차원에서도 장관회담과 관련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 Meeting: SOM)가 개최되어 주요 의제 및 합의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동북아 경제협의체

7)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해 온 APEC의 경우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적절히 대응치 못함에 따라 지역협력체로서의 역할에 의구심이 확산되었다. 반면에 동아시아 역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ASEAN+3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 개념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념보다 훨씬 부각되게 되었던 것이다.

가 없는 상태에서 회의 형식도 ASEAN+3 정상회담 후에 ASEAN+1의 형식으로 개최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비전그룹(East Asia Vision Group: EAVG), 재무차관회의 등 다각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되고 있어 역내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크게 강화되어 왔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대처방안으로 역내 외환위기 방지 및 금융협력 체제 구축, 동아시아 비전그룹 구성 등 다각적인 협력기반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1999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3차 정상회의에서는 ‘ASEAN+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East Asia Cooperation)’을 채택한 바 있다

한편 2000년 11월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차 ASEAN+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의 미래’와 ‘동아시아 협력강화’를 주제로 13개국 정상이 동아시아 역내 협력의 비전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2001년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정상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EAVG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차원의 실무적 검토를 위한 동아시아 연구그룹(East Asia Study Group: EASG)의 중점연구분야를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동아시아 포럼 창설,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창설로 설정하자고 제안하였다.

제2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김 대통령이 민간자문기구로서 제안한 바 있는 동아시아 비전그룹이 구성되어 경제분야의 협력은 물론 정치·사회·문화 분야에서의 협력도 포괄적으로 논의하였다. 5차례의 회의를 거쳐 동아시아 역내협력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비전을 담은 보고서를 2001년 ASEAN+3 정상회의에 보고하였다. EAVG 보고서는 크게 경제, 금융, 정치, 환경, 사회·문화, 제도적 협력 등 6개 부문에 대한 협력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제 및 금융분야에 대한 협력의 주요 내용은 <표 5>와 같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는 EAVG 보고서 내용을

〈그림 2〉 ASEAN + 3 협력체제의 주요 현황

주: 관련 장관회담으로 농림장관회담(2001), 노동장관회담(2001), 관광장관회담(2002), 환경장관 회담(2002), 보건장관회담(2003) 등이 개최되고 있음.

자료 : 필자작성.

정부차원에서 승계하여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을 결성, 동아시아 경제통합문제를 포함한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00년 ASEAN+3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정부차원에서 동아시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 설립을 제안하여 2001년 EASG가 발족되었으며, 2002년 정상회의(캄보디아)에서 EASG 최종보고서를 승인한 바 있다.

EASG 협력사업은 단기협력사업으로 최빈개도국 일반특혜관세(GSP) 확대, FDI 유치확대를 위한 투자환경조성, 동아시아 투자정보 네트워크 설립 등 무역 및 투자확대조치뿐만 아니라 인프라개발, 금융지원 및 민간참여 장려, 기술이전 및 공동기술개발, 통신인프라구축 및 인터넷 보급 확대 등 17개의 다양한 경제협력조치가 제시되었다.<sup>8)</sup> 또한 중장기인

---

8) EASG 최종보고서에는 17개 단기협력사업, 9개 중장기 및 추가연구사업 등 총 26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부표 1 참조).

〈표 5〉 EAVG 보고서의 주요내용(2001. 11)

<p>▲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추진 :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APEC의 보고르 목표(2010/2020) 이전에 추진하고, EAFTA 검토를 위한 각료급회의 개최.</p> <p>- 역내 최빈국을 위한 일반특혜관세 및 특혜조항을 고려.</p> <p>▲ FDI 확대를 위한 투자유인환경 조성 : 동아시아 투자정보 네트워크 및 중소기업의 투자증진과 행정·금융 지원체제를 수립.</p> <p>- ASEAN투자지역(AIA)을 동아시아 전체로 확대, 동아시아투자지역(EAIA) 설립.</p> <p>▲ 자원 및 인프라 공동개발 추진 : 인프라, IT, 인적자원개발 등 3개 우선분야.</p> <p>- 역내 저개발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p> <p>- 기술이전 및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협력.</p> <p>▲ 신경제하에서 인적자원 배양과 동아시아 정보하이웨이, 역내 소프트웨어 기술 및 멀티미디어 센터 건립, 동아시아 벤처기금 네트워크,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을 활성화 추진.</p> <p>▲ 금융협력분야 : 역내차입협정과 환율공조체제 구축, 동아시아 차입협정 또는 동아시아 통화기금(EAMF) 설립 추진 .</p>
--

자료 : 필자 작성

차원에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설립과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전환함으로써 동아시아 협력구도의 새로운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 Ⅲ. 경제통합에 대한 ASEAN의 시각과 전략

#### 1. AFTA 기반 확대 및 조기실현

동아시아 역내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는 매우 부진하였고, 단지 유일한 지역협력체로서 ASEAN만이 적극적인 대응을 해 왔다. ASEAN은 90년대 초반 이후 역내경제통합을 적극 추진해 왔고,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베트남, 미얀마 등 인도차이나 국가들을 신규회원국으로 가입시켜 ‘ASEAN 10’ 실현하였다. 특히 AFTA 조기

〈표 6〉 ASEAN의 경제협력 프로그램(AFTA 플러스) 추진현황

협력내용	프로그램	대 상	특 징	비 고
무역자유화	AFTA (1993년 개시)	포괄적 자유화 (원칙적으로 전제품)	단계적 관세 인하 (CEPT)  비관세장벽 철폐	CEPT 적용품목 이행 후 관세인하 : -20%~5%~0%, 2010/2015년 완료  수량규제의 철폐 등
	AICO (1996년 개시)	한정적 관세 인하 (제조업 부품 및 자재)	즉시 관세 인하	관세 0~5%
투자자유화	AIA (1998년 개시)	전업종 대상	내국인 우대조치 자본 및 노동이동 자유화	
서비스자유화	AFAS (1995년 개시)	서비스 분야	공통하위분야, ASEAN-X방식, 3차 협상 중	
기타 원활화 조치	지적소유권 보호	지적소유권 보호, 공통 상표제도 확립		
	규격표준의 상호인증	국제규격기준 적용, 시험증명기관의 정비, 정보교환, 인재육성		
	관세협정	관세분류, 통관수속, 관세평가의 통일간소화		
	경제정책의 협조	거시경제정책에 관한 정보교환, 재정정책규칙의 투명성 향상, 금융부문의 인재육성 등		
정보격차 완화	E-ASEAN (2000년 개시)	정보통신	IT관련 정책 및 규제완화, 인적자원 공동개발,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자료 : 권율의(2003), p. 36 참조.

실현을 추진하면서 AIA, ASEAN 지적소유권 협력협정, 규격 및 표준의 상호인증협정, ASEAN 관세협정 등 소위 'AFTA 플러스' 정책을 통해 동남아 시장통합을 적극 추진해 왔다(표 6 참조).

ASEAN의 지역통합정책의 핵심은 첫째, 공동유효특혜관세(CEPT) 인 하계획을 중심으로 한 무역자유화 조치로서 역내관세철폐를 목표로 AFTA가 추진되고 있고, 둘째 산업협력을 위한 한정적인 관세인하조치 로서 ASEAN 산업협력계획(ASEAN Industrial Cooperation: AICO)이 실시되 어 왔다. 셋째 투자자유화조치로서 아세안투자지대(ASEAN Investment Area: AIA)가 실행단계에 있다. 그 외에 비관세장벽 철폐를 통한 무역원

활화 조치, 지적재산권 보호, 규격·표준의 상호인증, 관세협정, 정책협조 등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중국경제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동남아의 단일시장 통합노력으로서 FDI 유치확대에 초점을 두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효율성 제고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ASEAN+3 협력체제에 있어서 ASEAN의 기본적인 전략은 AFTA의 조기실현을 통해 정치·경제적 지역협력체로서 ASEAN의 위상과 결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동북아와의 경제협력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ASEAN+3 정상회의의 추진과 병행하여 그동안 AFTA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 시장통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1998년 12월 ASEAN 정상회의에서 AFTA 실현을 2003년에서 2002년으로 앞당긴 바 있고,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노이 실행계획(Hanoi Action Plan: HAP)을 채택한 바 있다. 또한 1999년 11월 필리핀에서 개최되었던 제3차 ASEAN 비공식정상회의에서는 기존 6개 회원국은 최종적으로 2010년까지, 후발가입국은 2018년에서 2015년까지 역내관세를 철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sup>9)</sup>

9) 금융위기 이전부터 AFTA 조기 실현을 위해 ASEAN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1992년 1월 ASEAN 정상회의에서 AFTA 창설에 합의한 이래 1992년 12월 AFTA 평의회에서 역내무역자유화를 위해 공동유효특혜관세(CEPT) 추진에 합의하고, 2008년을 목표로 역내 공산품 관세를 5% 이하로 낮추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NAFTA, EU의 출범,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1995년 12월 ASEAN 경제각료회담에서 목표년도를 종전의 CEPT 협정 발효 후 15년(2008년)에서 10년(2003년)으로 5년간 단축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1998년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5차 정상회의에서 다시 1년 앞당겨 기존 회원국 ASEAN6에 한해 2002년으로 목표년도를 앞당기게 된 것이다. 특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1997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2차 비공식 ASEAN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ASEAN Vision 2020의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으로서 하노이 실행계획(HAP)을 채택한 바 있다.

〈표 7〉 ASEAN 6의 CEPT 관세인하 실행현황(2002년 7월 현재)

	관세인하				비율			
	0~5%	5% 초과	기타	계	0~5%	5% 초과	기타	계
브루나이	6,260	4	12	6,276	99.75	0.06	0.19	100.00
인도네시아	7,139	67	-	7,206	99.07	0.93	-	100.00
말레이시아	9,128	913	-	10,041	90.91	9.09	-	100.00
필리핀	5,370	206	-	5,576	96.31	3.69	-	100.00
싱가포르	5,859	-	-	5,859	100.00	-	-	100.00
태국	8,747	457	-	9,204	95.03	4.97	-	100.00
ASEAN 6	42,503	1,647	12	44,162	96.24	3.73	0.03	100.00
캄보디아	238	2,877	-	3,115	7.64	92.36	-	100.00
라오스	1,295	803	-	2,098	61.73	38.27	-	100.00
미얀마	2,850	730	-	3,580	79.61	20.39	-	100.00
베트남	3,623	1,936	-	5,559	65.17	34.83	-	100.00
CLMV	8,006	6,346	-	14,352	55.78	44.22	-	100.00
ASEAN 합계	50,509	7,993	12	58,514	86.32	13.66	0.02	100.00

자료: ASEAN 사무국

2002년 7월 현재 기준 6개국에 있어서 관세인하 적용품목은 총 44,162개가 설정되어 5% 이하의 관세인하 실행률은 96.2%에 이르고 있고, 5% 초과 관세인하 대상 품목비중은 3.8%에 불과하다(표7 참조). 국별 관세인하 실행률은 싱가포르 100%, 브루나이 99.75%, 말레이시아 90.91%, 태국 95.03%, 필리핀 96.31%, 인도네시아 99.07%이다. 한편 후발가입국인 베트남은 2003년까지 적용품목의 76.79%를 관세인하계획에 적용시켜 5% 이하로 관세를 낮추기로 하였으며,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2005년까지 관세인하율 목표를 각각 86.90%, 83.43%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AFTA는 회원국간 경제력차이가 크고, 역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현 단계에서는 무역창출효과보다는 부품산업관련 무역전환



효과가 예상되고 있어, 당분간 역내 교역확대보다는 외국인투자 여건의 개선을 통해 외국자본 유치를 확대하려는 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SEAN은 AFTA를 기반으로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AIA, ASEAN 지적소유권 협력협정, 규격 및 표준의 상호인증협정, ASEAN 관세협정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AFTA 조기 추진의 성과를 바탕으로 ASEAN+3 협력체제에 있어서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7일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ASEAN 정상회담에서 10개국 정상은 ASEAN 공동체(ASEAN Community) 달성을 위한 발리협약 II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큰 주목을 받았다. 정치·안보,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 등 3개 부문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ASEAN 공동체를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ASEAN 경제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회원국 10개국간에 경제적 수준, 문화·종교적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존중하면서, 회원국들의 동등한 기회와 번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하여 ASEAN 경제통합 심화를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경제적으로 내부 경제통합의 심화와 확대, 세계경제와의 연계를 통해 ASEAN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를 추구함으로써 1997년 발표된 ASEAN 2020 비전에 따라 경제통합을 추진하면서 ASEAN 단일시장, 무관세화, 서비스 및 인적 자원 원활화의 조기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AEC에 관한 고위급 실무반'(HLTF)을 설치키로 함으로써 회원국간의 구체적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2. 동북아 3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동남아시아의 성장잠재력과 역내 시장통합의 조기실현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AFTA는 EU와 NAFTA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고, 南-南협력체라는 구조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AFTA는 개발도상국간의 수평적 통합(horizontal integration)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역내기술 및 자본 부족에 따라 통합체내의 경제적 자립이나 내부결속력은 아직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통합체를 이끄는 중심국가(leading country)로서 역할을 수행할만한 나라가 없어 AFTA의 진로와 향후 추진력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가장 선진국인 싱가포르도 그 규모면에서 지역중심국이 되기에는 너무 작고, 인도네시아는 경제규모는 크나 아직 발전 단계에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이 유력하나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침체로 추진력을 갖기에는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ASEAN은 산업연관관계가 높은 동북아 3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와의 경제통합에 있어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와 제도적 통합에는 아직 미온적이고, 우선적으로 AFTA를 통한 단일시장 추진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주변국과는 ASEAN+1 차원에서 협상력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산업발전단계가 낮은 후발가입국(CLMV)은 AFTA를 통한 ASEAN 회원국간의 경제통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반응이고,<sup>10)</sup> 동

10) ASEAN은 동북아와 함께 호주, 뉴질랜드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ASEAN+CER 확대회담도 개최해 왔는데, 후발가입국들의 회의적 입장 때문에 2001년 9월 ASEAN 경제회담에서 ASEAN+CER 경제협체 구성에 많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 10년간 유예기한을 설정해 두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SEAN 회원국간 입장의 차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아시아차원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해서는 ASEAN 차원의 공식적 입장을 아직 구체적으로 표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개방도가 높은 싱가포르를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고, 말레이시아도 2001년 11월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ASEAN+3 사무국'을 설치하자는 등 역내 경제통합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ASEAN+3 협력체제에 대한 ASEAN의 기본적 시각은 동북아 3국과의 대등한 위치에서 동남아와 동북아의 실질적인 경제통합을 논의하는 역내협력체로서 보다는 ASEAN주도하에 무역·투자원활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역내 균형성장을 위한 개발협력확대 및 후발가입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확대를 논의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의 ASEAN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남방정책을 통해 동남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동안 ASEAN과는 협조와 갈등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치·군사적으로는 1970년대 캄보디아 분쟁 개입이후, 소원해졌던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왔으나, 그동안 남사군도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ASEAN과 중국간에는 분쟁과 갈등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동남아 화교세력을 의식하여 유화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동아시아 금융위기이후에는 위안화 평가절하를 유보함으로써 동남아 경제위기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sup>11)</sup> 특히 2000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에서 주룽지 총리가 ASEAN과의 FTA 추진을 전격적으로 제의함으로써 ASEAN+1 차원에서 중국은 ASEAN과 실질적인 협력기반을 강화할 것

11) 중국의 경우 ASEAN+3 협력체제에 참여하면서 1998년 하노이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담에서 위안화 가치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역내 거시경제협력을 위해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제안하여 사실상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통한 통화스왑협정 추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바 있다.

임을 표명하였고, 이후 중국과 ASEAN 관계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중국·ASEAN 자유무역지대 설립이 양 지역의 경제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양 지역간 자원, 상품 및 경제구조상의 상호보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sup>12)</sup>

200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담에서 중·ASEAN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공식 합의하였는데, 그중 관심을 끄는 것은 선자유화조치(Early Harvest Package)로서 양측의 합의를 전제로 품목별로 조속히 자유화를 실현한다는 것이다.<sup>13)</sup> 이것은 농업시장에 대한 중국의 시장개방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SEAN은 ‘선자유화조치’에 있어 공산품도 포함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과 ASEAN간의 양자간 교역은 공산품 교역이 전체 교역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교역 품목이 전자기기, 컴퓨터·기기, 플라스틱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역 상품의 구조는 양자간 교역이 연료, 석유, 목재 등 1차산품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조업의 경우 상호경쟁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ASEAN의 주요 생산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은 중국의 경쟁에 있어 이미 경쟁력 약화가 진행된 상태이며, 제3시장에서도 중국산 제품에 대하여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sup>14)</sup> 이러한 교역대상국의 양분화, 교역품목

12) KIEP 북경사무소 2002. 6. 10. 「중·아세안 고위관료회담, FTA 본격 추진키로」.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02-39호 참조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쌍방간 FTA 설립이 상호간의 무역과 투자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선진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을 증가시키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는 등 긍정적 인식을 표명하고 있다.

13)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선자유화조치’는 동물, 식용 육류와 내장, 생선, 낙농제품, 기타 동물제품, 살아있는 나무, 식용채소, 식용과일 및 견과류 등 8개 농림수산물에 대하여 적어도 2004년 1월까지 자유화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표 8〉 ASEAN의 대중국 교역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수출	1998	1999	2000	2001	수입	1998	1999	2000	2001
싱가포르	3,849	4,503	5,755	5,795	싱가포르	4,226	4,062	5,060	5,143
말레이시아	1,584	1,675	2,565	3,223	말레이시아	2,675	3,607	5,480	6,206
인도네시아	1,168	1,779	3,061	2,847	인도네시아	2,462	3,051	4,402	3,888
태국	1,132	1,437	2,244	2,504	태국	2,423	2,782	4,380	4,713
필리핀	1,492	1,380	1,464	1,622	필리핀	517	908	1,677	1,945
베트남	927	964	1,537	1,805	베트남	217	354	929	1,010
미얀마	517	407	496	498	미얀마	62	101	125	134
캄보디아	113	105	164	206	캄보디아	48	56	59	35
라오스	17	22	34	54	라오스	8	10	6	7
브루나이	9	8	13	17	브루나이	0	0	61	148
ASEAN(a)	10,808	12,280	17,333	18,571	ASEAN(a)	12,638	14,931	22,179	23,229
전세계(b)	180,516	195,177	249,240	266,661	전세계(b)	140,385	165,779	225,095	243,567
<b>a/b</b>	<b>6.0</b>	<b>6.3</b>	<b>7.0</b>	<b>7.0</b>	<b>a/b</b>	<b>9.0</b>	<b>9.0</b>	<b>9.9</b>	<b>9.5</b>

자료: KOTIS

의 단순화는 중국과 ASEAN 양자간의 FTA 협상타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으로 AFTA 진전과 함께 중·ASEAN 자유무역지대에 의한 역내 분업체제 개편은 동남아 국가들의 산업구조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SEAN은 금융위기이후 미국과 일본에 대한 높은 무역의존도 때문에 경제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는 판단하에 중국과의 수평적 분업관계를 구축하여 교역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sup>15)</sup> 중장기적으로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협력논의에 있어

14) Tamamura, Chiharu 2002: 69 참조

15) Mari Pangestu(2002) 참조

〈표 9〉 ASEAN의 대중국 주요교역품목

(단위: 백만 달러)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b>수 출</b>									
전자기기(85)	272	288	520	674	1,020	1,422	8,106	10,882	9,550
컴퓨터/기기(84)	290	436	605	985	1,309	1,336	4,867	5,764	5,073
광물성 연료 등(27)	1,463	1,306	1,399	1,740	1,706	997	3,196	4,595	4,404
플라스틱(39)	147	114	190	221	429	652	1,167	1,982	1,614
목재(44)	1,025	1,034	913	654	383	505	851	981	968
<b>수 입</b>									
전자기기(85)	480	901	1,313	1,982	3,047	2,442	5,748	9,291	7,255
컴퓨터/기기(84)	421	533	753	1,356	2,099	2,127	3,828	4,162	4,871
광물성 연료 등(27)	389	301	296	475	661	771	467	1,195	973
선박(89)	45	76	120	153	191	152	361	579	524
플라스틱(39)	37	66	86	96	136	142	309	499	458

주: 1) 괄호안은 HS 2단위 분류임.

2) 1993~98년까지는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만의 통계이며, 1999년에는 미얀마, 2000~01년에는 캄보디아가 추가됨.

자료: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인터넷사이트 [www.aseansec.org](http://www.aseansec.org) 참조

주도권을 잡고, 동남아 화교경제권과의 통합을 기반으로 ‘大中華經濟圈’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이 ASEAN과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합의하자, 일본은 향후 본격화될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작년 1월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ASEAN과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체결로서 1999년 12월 일본의 오부치 전총리와 고척동 총리와의 합의로 양국 FTA 공동연구가 추진되어 왔으나 중·ASEAN FTA 추진에 대응코자 신속히 협상을 마무리한 바 있다.<sup>16)</sup> 그러나 2002년 1월 체결된 ‘일·싱가포르 신시대 경제제휴협정

16) 2000년 9월 FTA협정 추진에 대한 일차적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고, 이를 토대로 2000년 10월 고척동 총리와 모리총리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

(Japan-Singapore Economic Agreement for a New Age Partnership : 이하 EPA)'은 기존의 FTA에 의한 무역자유화는 물론 금융, 정보통신, 과학기술, 방송, 관광 등 투자 및 서비스 시장개방과 인적교류를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협력협정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있어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어 온 농업을 포함한 일부 광공업 제품의 관세철폐에 부담을 느끼고,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EPA를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싱가포르 EPA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역자유화 부문은 일정부분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2002년 초 고이즈미 총리의 동남아 순방에서 나타나 바와 같이 동남아 각국은 농산물을 제외한 일본과의 FTA 추진에 냉소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동남아국가들과 개별적으로 FTA 추진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설치하고, 2003년 10월 발리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 기간 중 ASEAN과 포괄적 경제연대협정(Framework for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서명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일본정부는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양자간 FTA 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sup>17)</sup>

### 3. 지역통합에 대한 ASEAN 주요국의 입장전환

ASEAN은 현재 ASEAN+3 협력체제를 추진하면서 AFTA 조기실현, 동북아 3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라는 전략적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나, 개별회원국들은 각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지역협력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ASEAN 차원의 시장통합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위

---

진키로 공식합의 하여 4차례에 걸쳐 협상을 추진한 바 있으나, 당초 협정체결은 2003년으로 예상되어 왔다.

17) 일본정부는 2003년 12월 초 ASEAN 정상들을 동경에 초청하여「日·ASEAN 특별정상회의」를 주최하고,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에 가입하였다.

기이후 경제악화가 지속되면서 AFTA를 통한 경제통합과 그 효과자체에 회의적인 태국, 싱가포르 등은 쌍무적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지역에서는 지역주의 참여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ASEAN 각국은 AFTA의 무역자유화를 가속화하면서도 쌍무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개방경제체제를 통해 경제적 실익을 얻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이미 뉴질랜드, 일본, EFTA, 호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FTA 협상을 추진중인 국가는 멕시코, 캐나다, 한국, 인도 등이다. 특히 한국과는 2002년 11월 FT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를 개시, 3차례의 회의를 거쳐 지난 10월 최종보고서를 완성하였다. 한편 인도와는 2003년 5월 포괄적인 경제협력협정(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CEC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였다. 태국도 호주, 미국, 한국, 일본, 인도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고려하고 있고, 필리핀은 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일본과 FTA 추진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는 양국 경제협정 체결을 위한 검토 작업에 합의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 등 주변 동남아 국가들은 싱가포르, 태국 등이 쌍무적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역점을 둬으로써 AFTA, AIA 등 역내 지역 협력협정을 약화시키고, 주요 역외국가들에게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싱가포르와 태국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쌍무적인 FTA 추진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금년 2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과 비전을 발표하면서<sup>18)</sup> 싱가포르를 세계경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글로벌 도시

18) 싱가포르는 2001년 12월 고척동 총리의 지시로 정부차원에서 경제재검토위원회(ERC)를 구성하고,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향후 진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ERC는 리시엔룽(Lee Hsien Loong) 부수상 겸 재무장관이 의장이 되어 전부처 차원에서 작성되었고, 금년 2월 “새로운 도전과 목표-역동적인 글로벌



〈표 10〉 싱가포르가 기체결한 FTA 현황(2003년 10월 현재)

국/지역명	체결일자	협정명	발효시기
ASEAN	1992.1	ASEAN Free Trade Area (AFTA)	1993.1
뉴질랜드	2000.11	Agreement between New Zealand and Singapore on 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NZSCEP)	2001.1
일본	2002.1	Japan-Singapor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JSEPA)	2002.12
EFTA	2002.6	EFTA-Singapore FTA	2003.1
호주	2003.2	Singapore-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SAFTA)	2003.7
미국	2003.5	United State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USSFTA)	2004.1

자료: <http://www.fta.gov.sg/> 참조

〈표 11〉 싱가포르가 현재 추진중인 FTA 현황(2003년 10월 현재)

국/지역명	주요일정	현재 추진단계
멕시코	2000.6	4차 협상 완료
캐나다	2001.10	3차 협상 완료
중국	2002.11	ASEAN+중국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 체결
한국	2003.10	산관학 공동연구회 완료
인도	2003.4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선언문 작성
요르단	2003.6	싱가포르 FTA 추진제안
스리랑카	2003.8	싱가포르 FTA 추진제안

자료 : <http://www.fta.gov.sg/> 참조

(a leading global city)로서 육성한다는 기본 목표를 설정하고, 주요핵심과제로서 미국, 일본, EU 등 선진경제와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요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개방화를 보다 확대한다는 FTA 허브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과의 자유무역협

도시를 향하여(New Challenges, Fresh Goals-Towards a Dynamic Global City)”라는 국가전략보고서를 발표하여 FTA 추진전략을 포함한 2018년까지의 중장기적인 국가비전과 싱가포르 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정을 통해 국제비즈니스 허브로서 성장기반을 확대하겠다는 통상전략을 본격 추진중에 있다.

태국도 2001년 탁신정부 출범 이후 당초 보호주의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대외적으로 미국, 일본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데, 태국정부는 FTA 대상국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호주, 바레인, 페루, 인도, 일본 등을 선정하였다. 특히 인도와는 2001년 11월 태국수상의 인도방문시 FTA 추진을 논의한 이래 그동안 2차례의 협상을 통해 FTA 협정을 금년 말까지 체결하기 위하여 준비중이다.

주목되는 것은 동아시아 지역주의 확산과 함께 최근에는 인도-ASEAN간의 FTA 추진은 물론 인도와 태국, 싱가포르 등의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인도-동남아간 경제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01년 중국과 일본이 ASEAN과의 FTA를 거론하면서 인도·ASEAN FTA 논의도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다.<sup>19)</sup> 2002년 11월 프놈펜에서 개최된 인도-아세안 정상 회담에서 FTA 추진을 공식 발표한 바 있고, 인도-ASEAN FTA 초안에 의하면 인도는 현재 조기관세인하품목으로 100여 개 품목을 설정하여 2006년부터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난 10월 발리에서 개최된 ASEAN·인도 정상회의에서는 포괄적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앞으로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목표로 제도적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남아시아 경험기반 조성에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ASEAN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의 협력관계 강화정책은 중국, 일본의 관계에 대응한 상호 견제 및 균형유지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인도·ASEAN FTA는 비록 협정체결 기한을 10년으로 유보해 놓고 있지만, 최근 인도의 적

19) 2001년 ASEAN과의 교역규모는 각각 인도가 97억 달러인 반면 중국이 416억 달러에 달했으며, 중국의 무역흑자폭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금번 ASEAN과의 FTA를 비롯해 인도의 경쟁적인 FTA 참여는 중국을 의식한 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극적인 FTA 추진노력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 주요국과 쌍무적인 협정이 체결된다면, 지역간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미치는 정치적,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클 수 있다.

#### IV. ASEAN+3 협력체제에 대한 평가

그 동안 동아시아 역내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는 매우 부진하였으나,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역내협력 강화를 위한 ASEAN+ 한·중·일 정상회담이 역내 협의체로서 급속히 발전해 나가고 있다. 90년대 초반 EAEC가 APEC의 진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미국, 호주 등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ASEAN+3 협력체제는 현재 동아시아 정치·경제 공동체 성격을 가지면서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제정책 공조뿐만 아니라 금융 및 산업정책, 역내 개발협력 등 다양한 차원에서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실질적인 경제통합을 모색할 수 있는 주요 창구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금융위기 이후 ASEAN+3 정상회의가 그 동안 동아시아 국가간 공동관심사를 협의하기 위한 유용한 포럼으로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나, 운영형태 및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선 운영형태에 있어서 ASEAN이 주도권을 가지고, ASEAN+3 정상회의를 운용함으로써 동남아와 동북아의 균형 있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데 많은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ASEAN은 기존 동남아국가들간의 협력체제를 외연적으로 확대하여 ASEAN+3 정상회의, 각료회의, SOM, SEOM을 운용하고 있고, 회의일정이나 의제설정에서 ASEAN 회원국들의 사전합의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주요 결정을 하고 있다. 특히 정상회의의 경우 ASEAN+3 회의에 이어 한·중·일을 대상으로 각각

ASEAN+1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동아시아 역내협력을 위한 공동 현안보다는 ASEAN 측이 요구하는 경험사안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ASEAN이 지나치게 주도권을 행사하는 운영체제는 ASEAN+3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sup>20)</sup>

따라서 동북아 차원에서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활성화시켜 동북아 3국의 경험증진방안 및 주요 경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동북아 경제협업체’를 구성, 동남아와 동북아의 대등한 협력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발리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1999년 이래 처음으로 3국 공동선언을 채택하여 무역·투자, 정보·통신, 금융 등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정치·안보, 사회·문화 분야를 포괄하는 14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동북아 3국의 협력기반에 새로운 틀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반 협력방안들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는 3자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함으로써 3국간에 구체적인 협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동북아 3국이 포괄적인 협력방안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동북아와 동남아의 균형 있는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 향후 ASEAN+3 협력체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앞으로 지역주의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 EU, 미주 및 동아시아 경제권의 3극 체제 형성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에 따라 東아

20) ASEAN+3 정상회의를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변경하자는 제안은 EASG에서 중장기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부표 1참조). 이에 대해 현재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이 개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말레이시아는 동아시아 사무국을 설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ASEAN 차원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표명되지 않고 있으나, 일부 국가들이 ASEAN의 영향력 약화를 이유로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ASEAN 정상회담 기간 중에 동북아 3국과 인도 정상을 초청하여 ASEAN+3 정상회의와 ASEAN+1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으며, ASEAN 사무국과 순번으로 정해지는 ASEAN 회원국들만이 의장국을 맡고 있다.

시아내 무역·투자관계에서 나타나는 ‘기능적 통합’에 상응한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고,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은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EAVG 보고서는 물론 EASG 협력사업 중에 이미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ASEAN을 포함한 역내국가들이 아직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동아시아 역내경제구조를 고려해 볼 때 상호 경쟁적이면서 잠재적으로 상호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경제통합의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표 12〉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와 주요 지역협력체 비교

구분	APEC	ASEAN	ASEAN+3
성격	아태지역 정부간 경제협력기구	동남아 지역의 정치안보경제협력 기구	느슨한 형태의 경제협업체 (ASEM내 협의기구)
협력 형태	미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 주도의 남-북협력체	개도국간 남-남협력체	동아시아 지역내 남-북협력체
협력 이념	개방적 지역주의	폐쇄적 지역주의(AFTA 결성) 만장일치제, 내정불간섭주의	상호의존주의, equal partnership
회원국 구성	- 21개국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홍콩, 멕시코, 칠레 등	- 동남아 10개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 동남아 10개국과 한중일동북아 3개국
운영 체제	정상회의의 연례 개최 각료회의 : 년 1회 개최 - 무역투자위원회(CTT) - 예산행정위원회(BAC) - 경제위원회(EC) - 실무작업반회의	정상회의의 연례개최 외무장관회담(AMM) 매년 개최 경제장관회담(AEM)매년개최 - 상임위원회(ASC) - 아세안 사무국(자카르타) - 분야별 장관회의의 수시개최	정상회의의 연례개최 외무경제재무장관회담 연례개최 - 분야별 장관회의의 수시개최 - SOM, SEOM 개최 - 사무국, 상임위원회 없음
주요 협력 내용	무역투자자유화(IAP, CAP) 무역투자원활화 경제기술협력(ECOTECH)	공동유효특혜관세협정(CEPT) ASEAN 투자지역협정(AIA) 지적재산권협정, E-ASEAN	동아시아협력에 관한공동성명 (정치안보, 경제, 개발협력, 과학기술 등 포괄적 협력)
협력 목표	2010/2020년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통한 개방적 지역주의	동남아지역의 정치경제통합	역내 국가들의 균형발전 (equitable growth; 동반성장)

주: ASEAN+3의 협력이념과 협력목표는 필자의 견해임.

자료 : 필자 작성

그러나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경제 통합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대내적으로 많은 제약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우선 동아시아 국가들은 현재 사회문화, 정치체제뿐만 아니라 인구, 면적, 국민소득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갖고 있어 순조롭게 역내통합과 상호발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 할 수 있다.<sup>21)</sup> 또한 역내국가들의 태도와 정책이 긍정적으로 전환되었지만, 그 자체가 성공적인 협력을 보장해 줄 수는 없으며, 역내에 상존하는 문화적, 이념적, 종교적 이질성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ASEAN+3 협력체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결속이 경제협력체로 급속히 발전해 간다면, 또다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상실을 우려한 미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역외국의 반대가 예상된다. 동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아직도 최대시장인 대미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황임을 감안해 볼 때(그림 3 참조), 급속히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과의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유발시키고, 폐쇄적인 경제블록화 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단계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역내 개별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동북아 경제협의회 구성→동아시아 차원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라는 단계적 접근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 블록화 구상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차원의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경제통합으로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두르기보다는 ASEAN+3 협력체제를 지렛대로 역내국간의 조율, 미국 및 APEC과의 관계정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1) 세계은행의 개도국 분류에 의하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등은 1인당 GDP가 400달러 수준에 불과하고, 싱가포르와 일본은 1인당 GDP가 3만 달러수준에 이르고 있어 역내 경제적 격차가 매우 커서 저소득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림 3〉 ASEAN+3의 국별 역내수출 및 대미수출비중 비교(2001년) (단위: %)

자료 : 도 2-1과 동일

그 동안 우리나라는 ASEAN+3 협력체제에서 동아시아 협력비전을 제시하고,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 활동을 통해 한국주도로 역내 협력 과제로서 26개의 구체적인 협력조치를 도출하는 등 역내 협력기반강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역내국가들로부터 동북아와 동남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면서 역내 협력기반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ASEAN+3 협력체제는 동아시아 지역문제 논의에 있어서 ASEAN과 협력을 통해 일본, 중국과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고, 주요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발언권과 이익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ASEAN과의 관계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전략적으로 ASEAN과의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협력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7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도 나타났듯이 ASEAN을 축으로 중국, 일본은 물론 인도 등 주변국가들이 FTA 등 경험기반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주시하

면서 보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협력방향과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ASEAN과의 통상외교를 강화하여 내실 있는 경제협력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ASEAN측이 이미 제안한 바 있는 FTA 타당성 조사를 산·관·학 공동연구를 통하여 조기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우리정부는 동남아 국가들의 경협요청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거나 ASEAN+3 차원에서는 성과위주로 제시, 對아세안 협력사업이 경제적 실익을 고려하지 않고, 다소 방만하게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sup>22)</sup> ASEAN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을 회원국 협의를 통해 비교적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한 우리정부의 사전 검토와 외교부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과시성 사업을 지양하고, 동남아 각국에 신뢰감을 주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경제협력체제하에서 동남아 외교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상호호혜적인 차원에서 실리를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외교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외교부의 지속적인 정책조정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일본과는 달리 명분보다는 실속 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외교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V. 맺음말

그 동안 동아시아의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상호의존성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역내 제도적 경제통합논의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최근 ASEAN+3 협력체제를 매개로 한 동아시아 차원의 경제통합 움직임

22) 우리나라가 그동안 ASEAN+3 협력체제를 위해 제안한 각종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권을 외(2002: 113-116) 참조



임은 급물살을 타고 있고, ASEAN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경쟁적인 FTA 추진정책은 동아시아 역내 제도적 통합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ASEAN은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에 비해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열세에 있기 때문에 ASEAN+3 협력체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ASEAN+1 차원에서 ASEAN의 주도적 역할과 협상력을 유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즉, 동남아와 동북아의 균형 있는 협력관계보다는 중국, 일본과 개별적으로 포괄적인 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ASEAN+1 차원에 중점을 두고 있고, ASEAN+3 뿐만 아니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다각적인 협력체제 구축에도 역점을 둬으로써 상호 균형 및 견제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WTO에 의한 다자간 교역자유화가 지연되면서 앞으로도 지역주의 추세는 가속화되어 중장기적으로 EU, 미주 및 동아시아 경제권의 3극 체제 형성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의 협력기반 확대와 심화에 주목하면서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ASEAN을 매개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역내 협력구도의 시각변동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SEAN+3 협력체제가 현 단계에서 자유무역지대를 급격히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역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배타적인 지역주의 그 자체를 목표로 해서는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ASEAN+3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협력의 범위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으므로 당분간은 상호의존주의에 입각한 협의체 수준의 동아시아 경제협력체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ASEAN+3 협력체제를 통해 대외경제와 관련된 지역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가능하다면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APEC은 물

론 WTO 혹은 국제무대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협상력을 점차 제고해 나가면서 중장기적 차원에서 조정과 조화를 강조하는 점진적인 통합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급속히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역외국과의 불필요한 통상 마찰을 유발시키고, APEC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정세와 지역주의 추세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단계적이고 면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APEC과 ASEAN과는 달리 느슨한 형태의 동아시아 경제협의체를 유지하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역내국가들과의 쌍무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경제통합, 지역주의, 자유무역협정**

<부표 1> EASG에서 선정한 협력조치 목록(26개)

		구 체 내 용
단기협력 조치	경제적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시아 Business Council 설립</li> <li>- 최빈개도국에 대한 GSP 지위 및 특혜조치 부여</li> <li>- FDI 확대를 위한 투자유인환경 조성</li> <li>- 동아시아 투자정보 네트워크 설립</li> <li>- 성장지대내 자원인프라 공동개발, 금융지원 및 민간참여</li> <li>- 인프라, IT, 인적자원개발 등 3개 우선분야의 지원 및 협력 제공-FDI 및 전략적 제휴</li> <li>- 인터넷 access 확대를 위한 인터넷 IT 공동개발 및 통신 인프라 구축</li> </ul>
	정치적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적, 마약 거래 등 새로운 안보문제에 있어서의 협력메커니즘 강화</li> <li>- 동아시아 think tanks 네트워크 구축</li> </ul>
	사회, 문화, 교육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곤감소 프로그램 수립</li> <li>- 기초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조</li> <li>- 포괄적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의 이행</li> <li>- 동아시아 정체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문화, 교육기관과의 공동 노력</li> <li>- 예술, 문화재 및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네트워크 증진 및 전문가 교류</li> <li>- 역내 동아시아 연구 증진</li> </ul>
	제도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시아포럼 설립</li> </ul>
중장기 협력조치	경제적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설립</li> <li>- 중소기업에 의한 투자 확대</li> <li>- 아세안 투자지대 확대를 통한 동아시아 투자지대 설립</li> </ul>
	금융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시아 차입협정 또는 동아시아 통화기금 설립</li> <li>- 금융안정을 위하여 역내 긴밀한 환율공조체제 추진</li> </ul>
	환경, 에너지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정책 및 전략 기본방향 수립 및 범 ASEAN 에너지 네트워크 프로젝트 형태의 이행계획 수립</li> <li>- 동아시아 전역에서의 해양환경협력 증진</li> </ul>
	사회, 문화, 교육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참여 및 국가-시민 partnership 증진을 위하여, 정책자문 및 공조에 있어서 NGO와 긴밀한 협력</li> </ul>
	제도적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시아 정상회의</li> </ul>

자료 : 외교부

참고문헌

- 권 율. 1998. “동남아경제의 금융위기와 구조조정.” 『대외경제정책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1999. “일본의 동남아 진출전략과 新미야자와 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02a. 『ASEAN 산업 · 교역구조 분석』, 정책연구 02-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02b. “AFTA 관세인하계획 추진과 향후과제.” 『KIEP 세계경제』 4월호 5(4) 통권 43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03a. “싱가포르의 新국가비전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KIEP 세계경제』 4월호 6(4) 통권 55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03b. “ASEAN+3 정상회의의 성과와 시사점.” 『KIEP 세계경제』 10월호 6(10) 통권 61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권 율 외, 2002. 『한국의 태평양경제협력 외교: 방향과 전략』,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03. 『ASEAN 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정책연구 03-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유재원. 1990. 『ASEAN 주요국의 무역 · 산업정책과 투자환경변화』, 정책연구 90-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青木健編. 2001. 『AFTA : ASEAN經濟統合の實狀と展望』, JETRO.
- 丸屋豊二郎編. 2002. 『アジア國際分業再編と外國直接投資の役割』, アジア經濟研究所 · JETRO.
- 浦田秀次郎編. 2002. 『FTAガイドブック』, JETRO.
- ASEAN Secretariat. 1995. AFTA Reader. Vol. 2. 1995. Vol. 3. Jakarta.
- \_\_\_\_\_. 1999. *Sixth ASEAN Summit*. Jakarta.

- ASEAN Secretariat. 2002. *Southeast Asia : A Free Trade Area*. Jakarta.
- Bergsten, C. Fred. 2000. *The New Asian Challeng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IIE) Working Paper 00-4.
- Eichengreen, Barry. 2002. "What to Do with the Chiang Mai Initiative." Presented at the Asian Economic Panel in Tokyo. Organized by KIEP,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of Harvard University, and KEIO University.
- Gerald Tan. 1996. *ASEAN Economic Development and Cooperation*. Times Academic Press.
- Gen Yamamoto. 2002. "Evaluating the Logics of FTA Formation in International Economics: Economic Rational Consequence of Strategic Integrations." *Whither Free Trade Agreements? : Proliferation, Evaluation and Multilateralization* edited by Jiro Okamoto.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cs.
- Hadi Soesastro. 2001. "Towards an East Asian Regional Trading Arrangement." In Simon S. C. Tay(eds.). *Reinventing ASEAN*. Institute of Southeast Asia Studies(ISEAS). Singapore.
- Imada, P., S. Naya and M. Montes. 1992. *A Free Trade Area : Implication for ASEAN*. ISEAS. Singapore.
- Inkyo, Cheong. 2002.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Recent Development of FTAs and Policy Implications*. KIEP Policy Analyses 02-02.
- Mari Pangestu. 2002. "Facing the China Challenge: Options for Indonesia and Asean." In Mohamad Ikhsan, Chris Manning and Hadi Soesastro. *EKonomi Indonesia di Era Politik Baru*. KOMPAS press.
- Mya Tan and Carolyn L. Gates. 2001. *ASEAN Enlargement*. ISEAS. Singapore.

Naya, S. and M. G. Plummer. 1991. "ASE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ASEAN Economic Bulletin*. Vol. 7. No. 3. pp.261-276.

Pangestu, M. 1995. "ASEAN Free Trade Area (AFTA) : An Indonesian Perspective." *The Indonesian Quarterly*. Vol. 23. No. 1. pp.38-55.

Ramasamy, B. 1994. "The ASEAN Free Trade Area : Implications for Indonesia's Imports."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Vol. 30. No. 2. pp.149 ~ 157.

World Bank. 2001. *World Development Report 2002*.

UNCTAD. 2001. *World Investment Report 2001*.

<http://www.aseansec.org>

<http://www.straitstimes.asia1.com.sg>

<http://www.yonhapnews.net>

<http://www.president.go.kr>

<http://www.fta.gov.sg>

Abstract

## ASEAN on the Road to Closer Integration in East Asia

Kwon Yul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In spite of the expanded mutual dependence and the remarkable economic growth, discussions on intra-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have been at a standstill. However, a trend for economic integration of East Asia is accelerating with the ASEAN cooperating system.

ASEAN has been promoting economic integration since the early 1990s. It realized ASEAN 10 by increasing its membership through the additions of Vietnam, Myanmar, Laos and Cambodia (CLMV countries) to enlarge the effectiveness of economic integration. After China agreed to create an FTA with ASEAN at the 5th ASEAN+3 Summit in 2001, Japan considered the possibility of losing leadership over East Asia economic integration, leading it to see general cooperation with ASEAN.

As a result, Japan promptly agreed to the FTA with Singapore in 2002 and instituted a practical work detail for promoting FTA with each Southeast Asian Country, signing the Framework for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with ASEAN during the 7th ASEAN+3 Summit in Bali. Moreover, the Japanese government is set to hold an ASEAN summit in December 2003 and hold a Japan-ASEAN summit as a plan for economic relations with ASEAN.

Regionalism will be consistently accelerated and in the mid- and long-term, forming the three major economic blocs the EU, America and East Asia will be inevitable. To prepare for this outcom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enlargement and deepening of cooperation in East Asia and to prepare synthetic plans to deal rapidly with the trend of economic integration.

The range of East Asia cooperation under ASEAN+3 is increasing, providing new opportunities to East Asian countries. Therefore, an 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community under mutual dependence would be useful for the present. Through the ASEAN+3 cooperation channels, an exchange of views on regional issues of external economics and formulating steps together would raise the negotiation power of East Asian countries on the international stage such as APEC and WTO.

Consequently, Korea should strategically promote the plan toward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in three steps: first contracting an FTA with Singapore and ASEAN in the region; second, organizing the economic cooperation community of Northeast Asia and third, contracting FTA in the scope of East Asia. Korea should also continue to promote persistent relations with APEC and the United States while encouraging harmony with intra-regional countries using the ASEAN+3 system as a lever to hasten FTA agreements toward a direct and overall economic integration of East Asia.

**Key Words:** Economic Integration, Regionalism, Free Trade Area